

종합

여권, 세종시 기업 특혜 속도조절?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도해 온 세종시 수정 문제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 속도조절에 나선 듯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세종시의 기업 유치 특혜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권 일부가 제동을 걸고 나온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20일 세종시 수정 문제를 놓고 다른 지방으로부터 '역차별'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과도한 인센티브는) 가치 배분의 왜곡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장관은 이날 시내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번 인센티브를 주면 선풍이 될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차례 (총리실에)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과도한 인센티브는 가치 배분의 왜곡"

타 지자체 '역차별' 반발 의식 제동걸기 나선 듯

그는 또 "대안이 없는데 원안이 좋으나 수정안이 좋으나 얘기하는 것은 공리공론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의원은 민심을 받들고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의원을 설득하는 것보다 국민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기업의 세종시 이전 검토에 대해선 "(기업 이전이) 확실히 결정될 게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안 그러면 지역민에게 과도

한 기대와 실망감, 불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기업은 경제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가 오라고 한다고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이날 세종시의 기업유치 특혜 논란과 관련, "세종시 기업유치 특혜 논란과 관련, '세종시'가 아니라 '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세종시가 자족성 충족을 위해 기업을 다 모아서 기업도시로 가겠다고 하면 다른 지방에서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종시로 인해 다른 지방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민약 행정기관을 다시 수도권으로 가져가면서 지방에서 빈자리를 채우라는 식으로 가면 지방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종안을 만들 때까지 여러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정 총리가 공직을 처음 맡아 여러가지 매끄럽게 접근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액 불법과의 강력 단속"

鄭총리 '사교육비 대책' 지시

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의가 성행하는 것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해 단계적으로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학원 교습시간 제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선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는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날으는 위그선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900여일 앞두고 20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막한 세계박람회 한국 순회전시(EXPO x EXPO)에서 강동석 조직위원장과 로세르 탈레스 BIE(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 등 개막식 참석자들이 하늘을 나는 배 '위그선'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협 '세금 폭탄'

국세청 1,500억 추정금

농협중앙회가 국세청으로부터 1천5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추정하겠다고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농협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실시된 농협중앙회에 대해 세부조사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 처리 잘못 등을 발견하고 약 1천500억원의 추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보받은 추정금 규모는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 과세적부심이 진행 중인데 최종적인 추정금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추정액은 다음 달 초 확정된다.

세무조사와 관련, 농협은 "2004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된 정기조사로 안다"고 밝혔지만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 분리 등 개혁 작업과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광주 제조업 '일자리 늘었네'

市, 산업 인프라 확충 등 투자 여건 개선 효과

업체수 633개 증가...종사자수도 6천여명 늘어

지난 2년 동안 광주 지역 제조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제조업 신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시가 크고 작은 120개 제조업체를 유치한 데다 금형센터 등 산업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0일 '2009 광주 시장 백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제조업체 수는 지난 2006년 2천984개에서 2008년 3천617개로 633개(21.2%) 증가했고, 종사자 수도 2006년 6만1

천781명에서 2008년 6만8천103명으로 6천322명(10.2%) 늘었다.

업체별로 보면 대기업 수는 2006년과 2008년 14개로 변함이 없었으나, 종사자 수는 지난 2006년 2만3천438명에서 2008년 2만5천243명으로 1천805명(0.7%) 증가했다.

중소기업 수는 2006년 2천970개에서 2008년 3천603개로 633개(21.3%)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2006년 3만8천343명에서 2008년 4만2천860명으로 4천517명

(11.8%) 늘었다.

또 종업원 20인 이상 50인 미만 소기업도 1만1천694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천917명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2만5천243명으로 전년비 7.0%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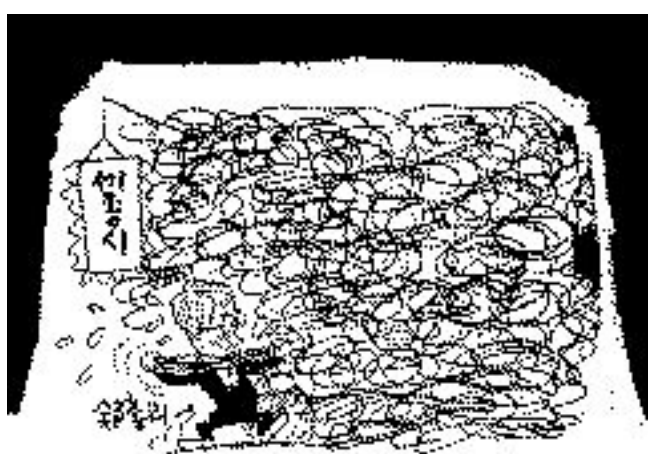
시는 이같은 증가추세는 산업 인프라를 크게 확충하는 등 지역 내 투자여건을 꾸준히 개선해온 결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조업 증가추세는 그동안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며 "앞으로도 첨단부품소재산업과 디자인산업, 신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지역 산업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빛의 만평

- 김종두



국무총리인지...세종시 총리인지, 원...

"보즈워스 방북 때 비핵화만 다를 것"

방북팀 4~5명 이틀간 체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내달 8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체류 일정을 1박2일로 잡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북미대화를 위한 방북단은 보즈워스 대표를 포함,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 4~5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방북단의 체류 일정에 대해 "보즈워스 대표는 평양에서 하루 반나절(a day and half) 가량 머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북단 규모에 대해서는 "4~5

명 정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북미대화의 의제를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한정함에 따라 방북단 체류 일정도 1박2일로 짧게 하고 인원도 소규모로 구성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보즈워스 대표를 12월8일 북한에 보내 양자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방북 시점을 발표했다.

한편 유엔은 이날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시설

혁신도시 지지부진에 지방 공기업 '휘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과장이 지방 공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부지 매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혁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지방 공기업들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에는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총 사업비의 58%인 8천188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은 이미 수 천억 원대의 돈을 금 융기관 등을 통해 빌리거나 사채를 발행했으나 땅이 팔리지 않으면서 이자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천490억원의 사업비를 은행권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3년간 20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했다. 전남개발공사 역시 연간 130억원대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이 연 200억 원대의 이자비용 부담 때문

에 허리가 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세종시 수정논란과 맞물리면서 이전대상 기관들이 부지매입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공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한국전력은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고도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이 미뤄지면서 공공 주택 등 일반 토지 분양 역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 공기업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혁신도시 건설을 세종시 논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필요한 때다. 정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안전 등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 부지 매입에 나서야 한다.

납득 안 되는 車보험료 인상 철회해야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10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정비수가 인상,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 등과 맞물려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난방비 급등에 이어 이래저래 서민 가계의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는 손해율이 손익 분기점인 71%를 넘어선다고 정비업체들이 정비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원가 상승요인이 있으면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먼저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다. 보험사들의 지난해 초과사업비는 무려 1천600억원에 달했다. 과당·출혈경쟁을 벌이지 않고 당초 책정된 사업비만 썼더라도 보험료를 인

하할 여력이 생길 수 있는 일이다. 반만 한 사업비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보험료를 올릴 공리만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사고 때는 보험금을 다른 운전자와 똑같이 받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이는 정말 황당한 논리다. 전체적으로 교통사고가 적어야 지급되는 보험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무사고 운전자를 우대하는 것은 상식이다.

보험사들은 손쉬운 보험료 인상으로 적자를 해결하려기 보다는 먼저 경영합리화에 나서야 한다. 보험금 누수를 막는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더 이상 운전자를 보험사의 적자를 메우는 '봉'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U 첫 대통령'에 반 롬푸이 벨기에 총리

유럽연합(EU) 개혁조약인 리스본조약에 따라 신설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에 헤르만 반 롬푸이(62 사진) 벨기에 총리가 선출됐다.

EU 이사회 순번의장국 대표로 19일 특별 정상회의를 주재한 프래드리크 레인캤트 스웨덴 총리는 "27개국 정상이 만장일치로 반 롬푸이 총리를 초대 상임의장에 선출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날 특별 정상회의에서는 또 영국의 캐서린 애쉬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초대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이하 외교대표)로 지명했다.

애쉬튼은 유럽회의의 동의를 얻어 취임할 수 있는데 브뤼셀 외교가에서는 무난하게 동의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속칭 'EU 대통령'이라고도 불리는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EU 외교장관'격이라 할 수 있는 외교안보 고위 대표까지 무난히 선출함으로써 EU는 정치적 통합이 한층 강화되고 대외적 영향력도 확대된 리스본조약 체제를 내달 1일 출범시킬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KBS 신임 사장에 김인규씨

김인규(59 사진)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 협회장이 차기 KBS 사장 후보자로 선정됐다.

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는 19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5명의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및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인규 회장을 차기 사장 후보자로 선정했으며,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양형일 前 의원 출판기념회

양형일 전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4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제1전시장에서 자서전 '진실이 신발끈을 매는 사이 거짓은 지구를 반 바퀴나 돈다' 출판 기념회를 한다.

이날 기념회에는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강은대, 이용승 의원, 무소속 정동영 의원, 김한길 전 의원,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안순일 교육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정체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